



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법률에 따른 절차와 국회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년 8월 26일 매일경제는 「국회 심의 필요없는 기금… 38조나 ‘재량 증액’」 제목의 기사에서,
 - “지난해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상 지출 규모는 당초 약 955조원에서 993조3000억원으로 4%인 38조3000억원 증가했”으며,
 -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이 “국회 동의 없이 변경”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국회의 통제 없이 정부 재량으로 이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-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받아야 합니다.
 - 다만, 「국가재정법」 제70조에 따라 非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% 이하, 금융성 기금은 30% 이하 등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자체 변경이 가능합니다.
 - 자체변경 내역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며, 국가결산보고서에 변경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의 결산 심사를 받습니다.

□ 기사에서 언급한 38.3조원 증가분 중 대부분인 34.9조원은 '25년 제1·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액으로, 국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반영되었습니다.

- 공공자금관리기금 증가액 34.9조원 중 32.2조원*은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일반회계에 공급하기 위한 예탁금(적자국채)으로, 전체 기금계획 증가분 (38.3조원)의 약 84%를 차지합니다.

* 제1회 추가경정예산 8.3조원 + 제2회 추가경정예산 23.9조원

-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각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국채의 발행·상환 등을 수행하는 자금관리성 기금으로, 이러한 예탁은 국민에게 직접 집행되는 정책사업비가 아니라 정부의 자금조달·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입니다.

□ 따라서 38.3조원 전체가 국회의 심사 없이 기금사업을 자체적으로 증액한 금액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.

- 해당 수치는 전체 기금의 지출계획을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은 총계 기준으로 합산한 것이며, 그 중 대부분인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등 변경액 34.9조원은 추경 편성과정에서 국회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.
- 이를 국민에게 직접 집행되는 기금사업비가 38.3조원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'재량(깜깜이) 증액'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내용과 국회 심사 절차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실 기금운용혁신과	책임자	과 장	김건민 (044-214-23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영 (zudoro@korea.kr)
	재정경제부 국고실 국고총괄과	책임자	과 장	정동영 (044-215-5110)
		담당자	사무관	정희진 (heejinjeong@korea.kr)